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 1998년을 중심으로

남성욱(경제학 박사) · 문성민(한국은행 북한경제팀 조사역)

1. 머리말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용어 중의 하나는 ‘부족의 경제(shortage economy)’다. 부족의 경제는 소비재 부문이나 생산재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며, 가끔씩 혹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집약적이며 만성적인 현상이라고 한다.¹⁾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부족의 경제는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이래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 되었다.

1)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28~234.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 부족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러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요를 축소,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불만을 표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족 현상에 적응하게 된다. 그들은 필요한 물자를 구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기도 하고,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를 사기 위하여 최고 10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한다.²⁾ 또한 물건 구입이 가능할 때에는 필요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하여 창고에 비축해 놓기도 한다.

사적 경제 활동은 이러한 부족의 경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부족 현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부의 생산 계획이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적 경제를 통해 물자를 조달한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사적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국영 기업과 협동 농장에 의해 위축되고는 있지만 사적 경제 활동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적 경제 활동의 형태는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동독, 헝가리 및 폴란드에서와 같이 정부의 공식적 허가를 받고 소규모 가족 단위로 경제 활동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소규모 농지를 사적으로 개간하는 형태가 있다. 북한의 경우 농민들이 텃밭을 일구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여러 형태의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 활동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수, 상품 및 여객의 수송, 전업농이

2) Zsuzsa, Kapitany, Janos Kornai, and Judit Szabo, "Reproduction of Shortage on the Hungarian Car Market", *Soviet Studies*, Vol. 36, No. 2(1984), pp. 236~256. 1989년 을 기준으로 동독의 경우 자동차 구입에 차종에 따라 0~17년, 헝가리는 차종에 따라 0~6년, 불가리아는 1~12년, 폴란드는 0~8년, 루마니아는 0~6년을 각각 기다린다.

아닌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정 개인이 다른 개인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폐나 혹은 다른 물건으로 보상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을 받지 않는 활동은 경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사적인 경제 활동을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라고 한다.³⁾ 비공식 경제는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충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간의 괴리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지난 1990년대부터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정치 체제의 붕괴까지 거론되었으나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경제 체제는 ‘그럭저럭’ 가동되고 있으며 소폭의 개혁(Minor Adjustment)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999년을 정점으로 하락세가 바닥을 지나가고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을 분석하면서 배급에 의해 공급되는 계획 경제에 과도한 비중을 둔 데다가 비공식 경제의 생산과 유통 부문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량난을 겪으면서 기아가 발생한 과정에서 정부의 배급 범위에서 벗어나 농민 시장

3)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83-86.

4) 조기 북한 붕괴론을 예측하였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Nicolas, Eberstadt,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No. 2(1997); Lee, Choon-Kun, "Outlook for North Korea in 1996: Survival or Collapse", *East Asian Review*, Vol. 8, No. 1(1996); Takashi, Sakai,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 of North Korean Ideology",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Suh, Jin-Young, "North Korea's Political Crisis and Four Scenarios regarding the Process of Changes", *East Asian Review*, Vol. 9, No. 2(1997).

5) 남성욱,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과정 편, 『북한연구』, 제2호(1999), 108~110쪽.

등을 통해 식량을 조달한 인구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식량을 자체 조달하는지에 대한 수량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또한 부족한 물자를 구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밀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밀무역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물량을 조달하였으며, 개인 부업과 같은 사적 경제 활동을 통해 경공업 부문의 부족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가 등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고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붕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난 분석에서 비공식적인 경제 부문의 연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각종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연구 수행이 어려웠다. 특히 북한 정부가 사적 부문의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계획 경제의 속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문의 연구는 북한 경제난의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서 시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제한적이거나 경제난이 절정에 달하였던 1998년을 중심으로 경제 전체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을 구분하고, 이중 시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추정하였다. 1998년은 1995년 식량 생산이 흉작을 기록한 이래 3년간에 걸친 가뭄과 대홍수가 교대로 발생하면서 식량난과 경제난이 만성화된 해이다. 주민들은 몇 년째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더 이상 당국의 계획 경제가 식량 부족과 물자 부족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체 해결에 나섰다. 또한 북한이 국제 기구로부터 식량 및 기타 물품을 지원받는 대가로 국제 기구 조사단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식량을 비롯한 각종 통계가 제한적이거나 공개되었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는 북한의 식량 생산 수준을 넘어 경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북한의 사적 경제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경제의 생산 부문 전체를 추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자가 소비 등에 대한 일률적인 통계의 결여로 추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자가 소비를 제외하고 북한의 농민 시장 및 암시장을 통해 유통된 규모, 즉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 부문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 가격 당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즉 시장 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제 영역을 의미한다.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 경제 활동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부문에 대한 추정은 계획 경제의 작동 기구가 적용되지 않는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는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2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체제를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혼재된 이중 구조로 규정하고, 시장 경제를 포함한 비공식 경제의 제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의 내용을 유통 측면과 생산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북한이 국제 기구 등에 제공한 자료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 탈북자의 증언, 그리고 국내에서 발표한 각종 추정치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5장에서는 시장 경제 부문 추정 결과가 주는 의미와 시장 경제 확산이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6장에서는 결론을 내려 보았다.

2. 북한의 경제 체제

1)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이중 구조

북한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다. 북한에서는 생산 수단을 국가 또는 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다. 생산 수단의 국(공)유화는 1946년 토지 개혁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화 형태로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어 1958년에 완료되었으며, 공업 등 산업 부문에서는 1960년에 국유화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가 완성되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생산과 소비, 자원의 배분과 이익의 분배 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국가의 계획으로 조정한다. 국가는 자원의 배분, 생산과 소비, 소득의 분배 등에 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기업소·협동 농장은 동 계획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물품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배급 체계가 와해되면서 계획 경제 체제로서의 북한 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은 배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됨으로써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될 상황에 이르자 국가의 계획이 아닌 사적인 이윤 동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으며, 사적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사적 경제 활동으로 농민 시장을 통한 거래가 늘어났으며,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경제 원리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농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 부문은 북한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사적 경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계획 경제 부문과 시장 경제 부문이 공존하고 있는 이중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이중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혼합 경제⁶⁾로 정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시장 경제와 관련한 경제 활동의 법제화 정도나 생산의 자체 완결 구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시장 경제 부문이 확대된 것은 식량난의 심화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며, 식량 사정이 완화되고 배급 체계가 정상화될 경우 시장 경제 부문은 북한 당국에 의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은 생산재나 자본 설비 등의 거래에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다만 농·수·축산물과 소비재에 국한되어 있으며 밀수나 계획 경제 부문으로부터의 유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자체 완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2) 비공식 경제의 제 개념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관찰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부문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비공식 경제’, ‘지하 경제’, ‘제2 경제’, ‘이차 경제’, ‘암흑 경

6) 소유 방식과 조정 기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각국의 경제 체제는 ① 자본주의 시장 경제, ② 자본주의 계획 경제, ③ 사회주의 계획 경제, ④ 사회주의 시장 경제, ⑤ 혼합 경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비관측 경제’, ‘등록되지 않은 경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체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을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 활동, 즉 계획 경제 이외의 부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비공식 경제’와 ‘제2 경제’를 들 수 있다. 비공식 경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제2 경제는 비공식적인 사적 영역, 소규모의 가족 경영,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용된 사적인 영역으로 구성되는 경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 즉 국가 또는 협동 조합의 소유 영역을 포괄하는 제1 경제(The First Economy)에 대비되는 개념이다.⁷⁾

북한의 계획 경제 이외의 부문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오승렬(1996), 장원태(1996), 김연철(1997), 김영운(1997), 최수영(1998), 전홍택(1998), 정세진(2000)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⁸⁾

7)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p. 85~86. 1971년 Karol에 의해 처음 도입된 제2 경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화폐와 소비재가 재분배되도록 자신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K. S. Karol,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sman*, June, (1971), pp. 8~10). 제2 경제의 개념을 보편화시킨 학자는 Grossman이다. 그는 "소련의 제2 경제"라는 논문에서 비계획 경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2 경제를 사용하였다. 그는 직접적인 사적 이익의 추구하고 실정법 위반여부의 인식 등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생산과 거래 활동은 제2 경제라고 하였다. 구 소련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개인 경작지에서 농산물 생산 및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는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제2 경제라고 한다(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No. 5, 1977, pp. 23~25). 또한 Garbor는 제2 경제를 "사회주의 부문에서 고용인으로서가 아닌 주민들이, 합법이나 불법이나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소득을 얻기 위한 모든 경제 활동, 즉 계획 경제의 생산과 분배 영역 밖에서 소득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Istvan R. Gabor,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 The Hungarian Experience", in Feige Edger L.(ed.), *The Underground Economies*(Cambridge, U. 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339].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 경제 부문은 제2 경제나 비공식 경제라는 용어보다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시장 경제 부문은 제2 경제나 비공식 경제라고 표현되는 경제 영역 중에서 시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부분은 계획 경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 경제나 비공식 경제에는 포함되지만 시장 경제 부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에는 국가 관할권 밖의 경제 활동, 즉 제2 경제나 비공식 경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경제에 비공식 경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계획 경제 체제에도 비공식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북한에 비공식 경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계획 경제 영역

8) 오승렬은 비공식 부문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비공식 부문을 북한 법 체제하에서 불법인 암거래 등의 경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1996), 16쪽]. 장원태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하 경제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 행위’라고 정의하고 지하 경제 또는 지하 유통을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제 행위는 지하 경제라고 하였다(“날로 확산되는 북한의 지하 경제”, 『LG 주간경제』, 1996. 10. 24, 21~22쪽). 김연철은 다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제2 경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김영운은 합법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을 제2 경제라고 규정하고 신고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의 합법적 생산을 포함한다고 정의를 내렸다[“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논총』, 제6권 1호(1997), 192~193쪽]. 최수영은 제2 경제를 반체제적인 행위, 이념적으로 지배 조직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경제 활동, 사회주의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불법 활동인 BPV(Benign Plan Violation) 등을 비롯한 모든 불법적인 경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7~8쪽]. 전홍택은 제2 경제를 계획 경제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사경제로 정의하였다[“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의 실태와 전망”, 『북한경제논총』, 제4호(1998), 30~32쪽]. 정세진은 제2 경제를 공식적인 계획 경제의 엄격히 규정된 틀을 벗어나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 중앙으로부터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차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북한의 지하 경제 확산과 지배 구조 변화”, 『통일경제』, 2월호(2000)];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13쪽].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대체로 비공식 경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또는 좁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활동은 단순히 정부의 관할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활동이 아니라 시장 경제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활동의 확산은 결국 북한이 시장 경제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북한에 존재하는 시장 경제 부문은 원론적 의미의 시장 경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론적 의미의 시장 경제는 자원의 배분, 생산과 소비, 이익의 분배 등과 같은 제반 경제적 과제를 시장 원리(market principle)에 의해 해결하는 경제 영역을 의미하지만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든 경제적 행동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장 경제 자체적인 완결 구조를 갖춘 상태도 아니다. 시장 경제 부문의 노동력은 계획 경제 부문의 유휴 노동력을 사용하는 등 많은 부분이 계획 경제 부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경제 부문이 활성화되거나 통제가 강화될 경우 이들은 시장 경제 부문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시장 경제 부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농민 시장이나 암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활동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사적인 이윤 동기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활동 영역을 시장 경제 부문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시장 경제 내용과 구성

1) 농민 시장(또는 장마당)의 변화 과정 및 현황

북한에서 사적 경제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며,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북한의 시장은 대체로 농민 시장(또는 장마당)과 암시장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농민 시장을 “협동 농장 농민들의 개인 부업 또는 공동 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북한이 자본주의적 요소인 농민 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를 북한의 재정 사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 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¹⁰⁾ 한편 김일성은 농민 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될 때만 농민 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¹¹⁾ 그러나 김일성의 예측과 달리 사회주의 혁명을 50년 넘게 했어도 농민 시장은 계획 경제의 부진으로 번창 일로에 놓였다.

9) 『김일성저작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65쪽.

10)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11) 『김일성저작집』, 제23권, 465쪽.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함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집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농민 시장은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였다. 계획 경제가 발전할 때에는 농민 시장이 위축되었고, 계획 경제가 북한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농민 시장이 확대되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도 대부분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상 생활 용품의 가격은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1953년 개인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가 당국이 가격 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59년까지는 개인 농업 경리, 개인 수공업 경리, 개인 상인 등이 모두 협동화 또는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농촌 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 시장'이 개설되었다. 1969년 '전국 상업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농민 시장을 1개 군에 1개소만 개설하도록 하고, 그 동안 1일장이었던 농민 시장을 10일마다 개장하도록 지시하였다.¹²⁾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과 저렴한 가격의 배급 정책으로 농민 시장을 통한 유통은 크게 축소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 시장을 활성화시킬 데 대한 김일성의 지시'로 상설 농민 시장 개장이 붐을 이루는 등 농민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 정무원이 농민 시장 이외에 1개 군마다 1~2개소의 일일 시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일일 시장은 각 시·군별로 3~4개씩 증가하였다. 남한의 시장은 주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므로 물건을 입하할 때 이외에는 농민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북한은 주로 농민들은 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농민 시장은 돌이나 콘크리트, 나무 울타리로 높이 2m 정도의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장 안에는 안전원(경찰) 단속반원들이 수십 명씩 깔려 있어

12) 이에 따라 농민 시장은 농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쉬기 때문에 휴일인 매달 1일, 11일, 21일에 열리게 되었다.

시장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간꾼, 도둑, 강도, 공업 제품 판매자들을 통제하고 있다.¹³⁾

한편 변경 무역과 부업발 등의 허용은 농민 시장의 거래 규모를 급속하게 확대시켰다. 무역 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국경 지대의 각 도, 각 군이 직접 중국 연변 지역과 자유 무역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경부터 변경 무역이 활성화되었다. 1984년 가내 부업을 장려하는 '8·3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을 계기로 간단한 식품(술, 떡 등) 생산은 물론 의류 및 신발의 생산 및 수선, 목수일 등 각종 개인 부업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7년경부터 기관, 기업소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여 평 규모의 부업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농민 시장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농민 시장의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결국 농민 시장의 확산을 용인하게 되었다. 또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 필수품의 대부분을 농민 시장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시장 경제는 북한에서 하나의 경제 부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1987년과 1992년에 농민 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매일장을 10일장으로 환원시키려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이를 취소하고 매일장을 다시 용인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93년 3월 보릿고개 절정기를 전후하여 그전까지는 엄격하게 단속하던 쌀, 옥수수 등의 곡물 판매가 사실상 묵인되었으며, 공산품의 거래도 확대되었다. 경제난이 악화된 최근에는 장마당에 국가 통제 품목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수남 구역의 경우 장마당에서 국가 통제 품목인 곡물이 개인 단위로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다

13) 윤용, 『북한의 지리여행』(서울: 문예산책, 1995), 68~70쪽.

고 한다. 장마당에 곡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에 납품되지 않고 처분됐거나 북한 당국이 국가 곡물 저장 창고로부터 빼돌린 것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물론 농민 시장 앞에 게시된 공고판에는 거래 제한 품목이 적혀 있지만 보통 총기류, 아편, 공장이나 군대에서 빼내온 국가 물품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거래가 묵인되고 있다. 그러나 빼내온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속이고 팔 수 밖에 없다고 한다.¹⁵⁾

1991년경에는 중국인들이 외국 상품을 공공연히 반입하여 밀매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인의 장사를 금지시킨 바 있으나 중국 지린성 당국의 항의로 다시 허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만연되자 1988년¹⁶⁾과 1999년 초부터 북한 전역의 장마당 폐쇄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장마당을 폐쇄하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국가 상업망을 통해 유통되어야 할 물품들이 대규모 장사꾼을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일이 많아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을 통해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확산되어 주민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데 더 큰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현실적인 수요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1999년 7월부터 쌀, 조, 수수 등의 곡물과 담배,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변화에 따라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시장 경제

14) 일본 시사 주간지 『AERA』, 2000年 3月 20日.

15) 김성철, “탈북자 대담 북한의 지방 공업”, 『통일경제』, 3월호(1999년).

16) 김정일은 북한의 최대 시장인 평양시 사동 구역의 송산 농민 시장이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자 1988년 3월 폐쇄를 명령하였다.

부문의 확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에는 이와 반대로 계획 경제 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인민경제 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김정일이 자유 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상반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농민 시장은 개설 취지와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공업용품의 암거래 집결소 및 공급지로 변해가고 있다.

농민 시장(또는 장마당)은 북한 당국이 인정한 합법 시장인 데 비하여 암시장은 불법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이 암시장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상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농민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식량을 개인 간에 은밀히 거래할 경우 이는 암시장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암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출처는 첫째, 사적 경작지에서 생산된 곡물, 둘째,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물품, 셋째, 외교관, 선원, 시베리아 벌목공 등 해외 여행자 또는 체류자의 반입품, 넷째, 중국 등 외국에서 들여온 밀수품, 다섯째, 계획 경제 부문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물품 등이다.¹⁷⁾

암시장에 참여하는 계층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문적인 보따리 장사꾼으로, 이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주로 퇴직자, 뇌물을 주고 노동 불능자로 판정받은 자, 가정 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휴가·출장 등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현재 70~80만 명으로, 북한 인구의 3~4%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경 지역에 가서 중국 상품을 구입하여 북한

17)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37~38쪽.

전역을 돌아다니며 비싼 값으로 팔거나 싼 지역에서 물건을 사다가 부족한 지역에 가서 비싼 값에 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며, 대체로 동요 계층이나 적대 계층 등 소위 ‘찍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출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 잘사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로, 부업으로 경작한 텃밭에서 자란 옥수수나 공장에서 절취한 물건, 집에서 만든 음식, 술 등을 내다 판다. 셋째, 나머지 40% 정도를 차지하는 간부 계층을 포함한 핵심 계층 또는 일부 동요 계층은 성분이 좋아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역시 권력을 이용해 국영 상점에서 국정 가격으로 물건을 빼내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차로 실어내어 친척들을 동원하여 암시장에다 내다 파는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¹⁸⁾

암시장은 주로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암거래의 한 형태로 나타난 현상이 ‘뽕뽕기장’이다. 뽕뽕기장은 길거리나 골목길 등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행인처럼 한두 명씩 모여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물건을 마대에 늘어놓지 않고 가까운 집에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작은 물건의 경우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등 물건을 조금씩만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한다. 뽕뽕기장에 나오는 장사꾼들은 겉보기에는 행인처럼 별다른 표시가 나지 않지만 물건을 자주 구입하는 주민이나 장사꾼들은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만 봐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안전원이 나타나면 인근에 친분이 있는 집에 숨거나 도망갔다가 안전원이 가고 나면 다시 나타나서 장사를 한다. 또한 장마당에서는 북한 당국의 단속이 엄격한 옷감 등 금지

18) 김경숙,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화 방안”, 코리아스코프(www.koreascope.org), 1999.

품목은 단속에 걸려 압수당할 것을 우려해 품목과 가격을 적은 ‘카탈로그’나 ‘샘플’만을 들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강압적인 단속에 대한 저항이자 북한 서민들의 지혜라고 한다.¹⁹⁾

이외에도 일부 장사꾼들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판매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다. 장마당에서 판매하던 물건을 모두 집에 숨겨두고 일부 물건만을 배낭에 넣고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제품 성질과 우수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방문 판매’를 한다.

이처럼 당국의 통제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장사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돈맛을 알고 바뀐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단속을 한다고 그것이 바뀌겠는가”, “통제와 단속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억누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국의 단속을 무시하고 있다.²⁰⁾ 따라서 농민 시장이나 암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필품 획득은 물론 정보 교환의 장소로서 개인주의 사상 의식을 유포 및 조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당은 군·구역·리 당 비서들로 하여금 자기 지역의 농민 시장에 직접 나가 선전 사업을 벌이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농민 시장이라면서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 시장 경제 부문의 물품 공급 유형

(1) 뒷밭 등에 의한 농산물 공급

사적 생산에 의해 공급되는 농산물은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은 이러한 농산물의 사적 생산을 합법

19) 『연합뉴스』, 2000년 3월 23일.

20)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 주민이 증언하는 북한이야기”, www.nis.go.kr, 1999년 11월.

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1998년 9월 5일) 제24조는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농촌에서 집단 농업 체제를 벗어난 경작 형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텃밭, 부업밭, 돼기밭이 그것이다. 텃밭과 부업밭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과 같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텃밭에는 원래 채소 등의 부식물을 심도록 되어 있으나 농민들은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며, 그 외 콩, 마늘 등 농민 시장에서 환금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한다. 작은 채소를 기른다는 의미에서 ‘소채전’이라고 부르며, 규모는 30평 미만²¹⁾(3인 가족 기준 25평 내외)이지만 생산성이 높아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의 20% 이상을 상회한다. 탈북난민 1호로 공인된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사 리민복 씨가 농업 연구가로서 직접 시험해보고 전국 출장으로 돌아온 데 의하면, 개인농에 비하여 전체농의 생산성은 대체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텃밭, 개인 돼기밭(일명 부대기밭, 자류지)의 생산성은 협동 농장 밭보다 3~5배 높다고 주장한다.²²⁾ 텃밭 생산의 규모는 4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사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텃밭을 과도기적인 낙후된 생산 형태로 보고 있으며, 전 인민적 소유가 실현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생산 영역으로 남아있고, 최근에는 농민들이 협동 농장의 자재 등을 비밀리에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측

21) 북한 전직 외교관 고영환은 개인 텃밭의 규모에 대해 “텃밭은 농가와 농가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일구는데, 집이 드문드문 있는 데는 너비 10m에 길이 50m나 되는 곳도 있다. 농장의 밭 중에 그 반밖에 되지 않은 것도 있는 데 비하면 굉장히 넓은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 고려원, 1992), 58쪽.

22) 대산농촌문화재단 심포지엄 보고서, 『새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 협력』(서울 : 도서출판 백의, 1999), 100~102쪽.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업밭이란 작업반이나 직장 등 각 단위별로 척박한 땅을 활용해 옥수수나 콩을 경작, 공동 소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장 부업밭은 직장이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야산을 소속 노동자에게 각자 50여 평씩 개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농민들은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배급 이외에 텃밭으로도 부족량이 해결되지 않자 집 근처 야산 등에 밭을 일궈 식량을 생산한다. 텃밭이나 부업밭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데 반해 폐기밭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작 형태다. 물론 이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함경북도에서는 ‘소토지’라고 부르며²³⁾ 개울가나 낮은 언덕 등과 같이 버려진 땅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개인 경작 형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식량난 지속에 따라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폐기밭의 생산 규모 역시 적지 않다. 리민복 연구사는 농장원 한 명이 365일 열심히 일해서 약 180kg 정도를 결산 분배받는데, 일주일에 이를 내지 사흘만 폐기밭에 신경 쓰면 1년에 200kg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⁴⁾ 그러나 폐기밭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닌 만큼 생산량 전부가 경작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평소에는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수확 시기에 ‘폐기밭 검열 그루빠’가 돌아다니면서 폐기밭의 수확량을 확일적으로 계산하여 협동 농장에서 배분할 때 그 양만큼을 제하고 준다. 그런데 야산을 개간해서 일군 땅이면 수확량이 일반 경작지에서 나온 수확량보다 많을 수가 없다. 따라서 폐기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자신들의 수확량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는 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식량이 절대적으

23) 탈북자 최동철은 “다른 데서는 폐기밭이라 부르는 모양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소토지라고 부르는 개인 경작지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최웅철, “탈북자 대담”, 『통일한국』, 4월호(1996년), 70쪽.

24)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핸드북』(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245~247쪽.

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 담당 기관들과의 안면 관계를 이용하거나 뇌물을 주어가면서 폐기발을 일구고 있다.²⁵⁾

(2) 부업 등에 의한 경공업 제품 공급

경공업 및 소비재 제품의 비공식 생산은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과 관련이 깊다.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은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의 가내 작업반을 확대·개편한 생활 필수품 생산 증대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에 조직된 가내 작업반을 확대 조직하여 8·3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 경쟁 운동이다. 8·3 인민 소비품이란 “기관, 기업소, 협동 단체와 가내 작업반, 부업반, 가내 편의 봉사원들이 지방의 유향 자재와 폐기 폐설물, 부산물을 동원 리용하여 만든 국가 계획에 없는 제품”을 말한다.²⁶⁾ 북한은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안에 생필품 직장, 생필품 작업반 등을 조직,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산 활동 이외에 부산물과 폐설물을 이용한 생필품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생산된 생활 필수품은 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며, 국영 직매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민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8·3 인민 소비품은 국가 계획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앙의 생산 할당과 원료 조달 등에서 벗어나 있

25) 김정일, “북한의 농장실태와 농민생활”, 『통일한국』, 8월호(1999).

26) 『민주조선』, 1989년 5월 27일.

27) 예를 들어, 북한이 공업 관리 체계의 모범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대안중기계의 경우에도 변압기를 제작하여 북한 화폐 단위로 150원에 암거래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5년 11월.

다. 이런 점에서 8·3 인민 소비품은 생산 측면에서 제2 경제의 측면이 강하다. 생산 조직의 특성상 생필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보다는 가내 작업반과 부업반에서 생산하는 8·3 인민 소비품이 보다 많은 사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가내 작업반과 부업반을 당국이 철저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²⁸⁾

개인이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형태는 개인 1명이 하는 경우와 3~5명이 단체로 하는 경우 두 가지이다. 개인 1명이 하는 경우에는 공장, 기업소의 '8·3 인민 소비품 생산반', 철제 공장의 '생필반', 상업 관리소나 급양 관리소 등의 '부업반', 인민반의 '가내반' 등에 형식적인 직장 등록만 마친 후 자기 집에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3~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명칭을 만들어 동 행정 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²⁹⁾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10%를 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설비는 주로 인근 공장 기업소에서 몰래 가져온 자재들을 조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밀 무역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고양이 뿔 외에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다.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 기계를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며, 약품류는 과거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 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한다. 맥주는 농민 시장에서 원료를 직접 제조하고, 병과 마개는 별도로 외부에서 구입 또는 직접 만든다.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

28)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28쪽.

29) 개인이 물건을 제조할 때 다른 '가내반'에 형식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가내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불법' 운운하며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북한 이 탈주민이 증언한 북한 이야기", www.nis.go.kr, 1999년 11월.

과 별반 모양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가내품은 개인의 노력이 기업소의 제품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의 질이 높고 가격도 저렴하여 장마당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개인 물품 제조가 성행하자 주민들은 “이제는 8·3 인구(개인 물품 제조업자)가 없으면 필요한 물건은 구경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국영 상업을 대신하여 개인들의 소비를 담당하고 있다.³⁰⁾

(3) 밀무역을 통한 공급

덧밭, 떼기밭, 부엌밭은 농산물, 가내 생산은 소비재를 생산 공급하는 국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밀무역이나 관료들의 부정 부패로 반출된 공식 수입 제품의 국내 암시장 유통은 대외적인 요인이다. 1990년대의 북한의 대외 무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어 1998년의 실적은 199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무역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북한 경제가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 부족 현상을 개선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생산 요소의 수

<표 1> 북한의 대외 무역 실적(1990~1999)

구분/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출	1,265	951	916	938	839	736	726	904	559	515
수입	1,824	1,643	1,554	1,538	1,269	1,316	1,250	1,272	883	965
총액	3,089	2,604	2,470	2,477	2,108	2,052	1,976	2,177	1,442	1,479
무역수지	-559	-692	-638	-600	-430	-580	-524	-368	-324	-450

* 출처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1990~1999년도 판.

30) 위의 글.

입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는 생산 요소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다시 생산 감소 현상을 통하여 수출 부진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부진으로 인한 외화 획득 감소는 생산 요소 수입 감소로 연결됨으로써 북한 경제는 악순환의 함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북한 경제를 침체의 나락으로 물고 갔으며, 대외 무역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³¹⁾

중국과의 밀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의 변경 무역(邊境貿易)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 상당 부분 암시장 및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낙후된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인근 국가들과 원활한 경제 교류를 가짐으로써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들 지역과 인근 국가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 관세, 증치세 상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루어지는 거래를 변경 무역이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는 변경 무역은 대부분 소액 무역 형태로, 중국에서 허가한 지역에서 무역 권한을 가진 기업이 정해진 변경 세관을 통해 북한측 기업 및 무역 기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³²⁾ 북·중 간 변경 무역은 북한산 수산물, 목재, 한약재, 누에고치, 고철 등과 같은 중국산 저가 경공업 생필품, 의류, 곡물류, 전자 제품 등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결제 수단 부족으로 상당 부분은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 북한 변경 무역 지역은 랴오닝성(遼寧省)의 단둥, 지린성(吉林省)의 훈춘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북·중 간의 교역은 1993년 8억 9,000만 달러로 최고에 달하였으나 1994~1997년은 약 6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에 감소했다가 1999년 하반기 들어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체 교역 감소 추세에서도 변경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

31)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통일경제』, 9월호(1999), 16~23쪽.

32) 곽복선, “북한과의 중국 교역 통로-변경무역”, 『통일경제』, 11월호(1999), 86~90쪽.

지하는 비중은 30%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에 32.2%, 1998년 32.0%, 1999년 상반기에는 30.2%로 전체 교역의 3분의 1이 변경 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의주 맞은편에 위치한 단동시는 북한의 대중국 창구로서 단동에서 수입된 물자들은 북한 내 평양, 원산, 개성 및 강원도 일대까지 유통되고 있다.

특히 1983년에 조인된 중국과 북한의 자유 무역 협정에 의하여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중국 제품이나 기타 외제품을 가지고 들어가 북한에서 1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북한의 인접 군, 읍에 있는 중국인 전용 시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북한판 '홍콩, 마카오'가 형성되었다. 이곳은 북한의 유명한 상업 중심지로서 없는 물건이 없으며, 내로라 하는 장사꾼들이 모여서 부를 축적하는 마당이 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인접 군으로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남양 시장(함경북도 은성군 남양리), 회령 시장(함경북도 회령시), 무산 시장(함경북도 무산군), 혜산 시장(량강도 혜산시), 신의주 시장(평안북도 신의주시) 등 다섯 곳이다. 이곳 중국인 시장은 매일 개장되는데, 보통 200~1,000여 명의 중국인 장사꾼들이 상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에서 가장 싸고 질 낮은 제품들을 가져다 비싼 가격으로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거래되는 품목은 수백 가지의 생활필수품들이고, 심지어 상표가 떼어진 한국산 옷, 신발류, 가전 제품까지 거래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품목은 북한산 골동품과 고급 철제품, 그리고 금, 은, 동 등 희귀 금속 등이다.³³⁾

한편 이와 같은 공식·비공식 무역으로 수입된 물품 이외에 외교관들의 물품 반입과 재일 조총련 및 일본인 처들의 친척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시장 및 장마당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약 9

33)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 73~78쪽.

만 4,000명에 달하는 북송자들이 일본에 있는 친지들에게 식품이나 일용품, 약품 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함에 따라 친지들이 배편으로 물건을 부치거나 고향 방문단 참여시 물건을 지참하여 가곤 한다. 그 중에는 트럭이나 승용차, 공작 기계, 전자 제품 등 당 기관이나 직장 상사에게 뇌물로 사용될 물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80년대에는 엔화를 현금으로 보내 달라는 편지도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평양을 위시하여 직할시(개성, 남포)나 도청 소재지(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해주)에 엔화 상점이 차례로 생겨났다. 이것은 귀국자들이 일본에서 보내온 물건의 상당 부분을 당이나 정부 기관, 또는 직장 상사에게 뇌물로 주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그 물건들을 팔아 외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국영 암시장이 개설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³⁴⁾ 북한에서는 외교부 외교관들도 모내기 및 추수철 등 농사철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연속 노력 동원에 나간다. 외교관들은 농촌 지원을 나갈 때 외국에서 가져온 의류, 직물, 화장품 등 경공업 제품을 가지고 가서 닭, 돼지 등과 직접 바꾸는 사업(바터 무역)을 한다고 한다.³⁵⁾

4.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 추정

북한은 사적 경제 관련 통계 자료를 거의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발표되고 있는 자료도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북한 경제 연구에

34) 에야 오사무, 김종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161~165쪽.

35) 고영환, 『평양 25시』, 53~55쪽.

있어서 북한이 발표한 사적 경제 통계를 사용하여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것은 북한 경제가 생산, 소비, 분배 등의 제반 경제적 과제를 국가 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계획 경제 체제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계획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장 경제 부문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장 경제 부문이 북한의 계획 경제에 대해 단순히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1) 기존 연구 검토

북한이 발표한 사적 경제 통계로는 1961년까지 발표한 소매 상품 총 유통액 중 개인 시장 및 농민 시장의 비율과 금액이 있다. 1960년의 소유 형태별 소매 상품 유통액을 보면, 총액 18억 600만 원 가운데 국영이 14억 2,400만 원(78.8%), 협동 단체가 3억 6,800만 원(20.4%), 농민 시장이 1,400만 원(0.8%)으로 국공영 상업 유통액이 99.2%를 점유하였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의해 개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던 모든 상업 활동이 금지되고 사회주의 경제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으로 전환되었다. 1959년 이후부터는 소매업의 99% 이상이 국영 또는 협동 단체에 의한 경영으로 전환되었고, 사적 경영은 1% 미만에 불과했다.³⁶⁾ 북한의 공

<표 2> 소유 형태별 소매 상품 유통액(경상 가격 기준, 단위: 백만 원, %)

연도/구분	유통총액	국영	협동단체	농민시장
1949	368 (-)	89 (-)	92 (-)	-
1956	771 (11.1)	341 (21.1)	273 (16.8)	-
1960	1,806 (23.7)	1,424 (43.0)	368 (7.8)	14 (-)
1961	2,023 (5.8)	1,609 (6.3)	390 (2.9)	16 (6.9)
1970	5,779 (12.4)	4,557 (12.3)	1,177 (13.1)	45 (12.1)
1977	8,669 (6.0)	6,836 (6.0)	1,766 (6.0)	68 (6.1)
1984	12,189 (5.0)	9,617 (5.0)	2,486 (5.0)	85 (3.2)
1993	13,259 (0.9)	10,461 (0.9)	2,705 (0.9)	93 (1.0)

* 주: 1) () 안은 연평균 증가율, %.

2) 소매 상품 유통액의 상기연도 대비 연평균 증가율임.

3) 1961년까지는 개인 시장이 존재하여 유통 총액과 여타 항목 합계가 불일치함.

* 출처: 1949~1961년은 『조선중앙연감』 각 연도, 이후는 통일원 추정치.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서울: 공보처, 1996), 91쪽에서 재인용.

식 발표 이후에는 통일원 등 정부 기관에서 북한의 종합적인 실물 계획 수행률을 기준으로 7~10년 단위로 상업·유통의 윤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 형태별 상업·유통 구조가 불변이고, 계획 수행률과 소매 상품 유통 부문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현실적인 소매 상품 유통액을 나타내 주는 경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공식 발표 이외에도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추정치가 북한을 방문한 국제 기구 직원이나 외국인 또는 탈북자들의 언급을 토대로 하여 간헐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

36) 연합통신, 『북한 50년』(서울: 연합통신사, 1995), 151~152쪽.

나 부분적인 추정치만이 발표되었다. 동용승(1997)은 북한 GNP의 15% 정도가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은행이 1995년 북한 경제 규모를 223억 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를 전체로 했을 경우 1995년 암시장 규모는 33억 5,000만 달러 정도이다. 그리고 일반 농민의 경공업 제품 구입시 암시장 이용 비율 95%, 도시 근로자의 경우 식량 소요량의 40~50%는 암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⁷⁾ 암시장의 이용 비율은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제시되는데, 탈북자의 탈북 시기 및 지역, 직업 등에 따라 다르다.³⁸⁾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증언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심하여 북한의 전체 규모로 확대하기에는 신뢰성이 약하다. 또한 각 분야별로 종합된 것이 아니라 경공업 제품이나 일부 소비재 등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인 시장 경제 부문으로 유추하기도 어렵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북한 사회에서 핵심 계층에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 사회 전체에 대한 정보도 단편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 전체를 조망하는 추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2) 지출 측면에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

통일부는 1998년 하반기에 탈북 주민과 방북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도 자료’³⁹⁾로 발표하였는데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일반 주민들은 주곡의 60%와 생활 필수품의 70%를 농민 시장에서 구입

37)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확산”, 『삼성경제』, 5월호(1997년).

3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278쪽; 귀순자 고청송, 최명학, 윤용의 증언에 의하면, 암시장 구입 비율은 공산품은 80%, 주식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 60%라고 한다.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9), 48쪽; 소비 생활의 95%를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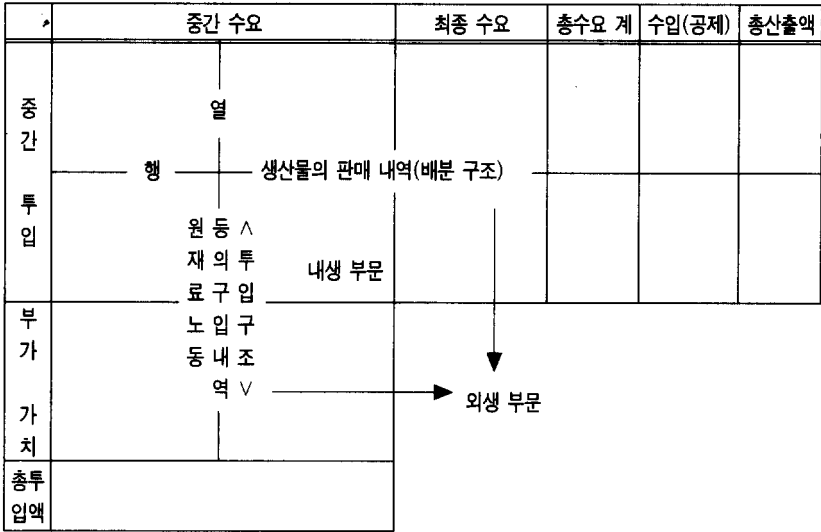
39) 통일부, “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1999년 1월.

한다. 만약 북한 주민이 소비하고 있는 주곡과 생활 필수품의 총 규모를 알 수 있다면 통일부 보도 자료 내용을 이용하여 농민 시장의 규모와 북한 경제 전체에서 농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개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여러 기관에서 추정 자료가 발표되고 있어 곡물 부문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시장 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 필수품의 경우에는 총생산 규모나 일반 주민들의 소비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어 별도의 추정 작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곡물과 생활 필수품의 거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 마진이나 운임, 그리고 음식, 숙박, 수선 등의 서비스 제공 행위도 시장 경제 규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곡물 및 생활 필수품의 총 생산 규모와 북한 주민들의 최종 소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1998년 북한 GDP 추정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통일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최종 소비 중에서 시장 이용 비중과 관련한 가정들을 전제로 북한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 추정치는 북한에서 생산된 ‘부가 가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의 산업 부문별 최종 소비 규모를 추정하는 데 부가 가치 생산 총액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은 곡물 부문에서 생산된 부가 가치의 일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총생산의 일부를 소비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 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에 따르면 생산, 지출, 분배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 국민 소득이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이 법칙은 한 나라의 국민 소득 총액에 대한 원칙이지 개별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각 산업 부문의 최종 소비 규모를 파

<그림 1> 산업 연관표의 기본 구조



악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총산출액(부가 가치+중간 투입)을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북한의 GDP 추정 자료』에서 제시된 각 산업의 부가 가치 생산액에 중간 투입액을 합한 각 산업의 총산출액을 사용하였으며, 북한이 생산한 각 산업 부문의 총 산출액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최종 소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총산출액 등을 이용하여 각 산업의 분배 및 투입 구조를 분석하는 ‘산업 연관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였다.

산업 연관표의 가로 방향(행)은 각 산업 부문 생산물의 판매, 즉 배분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 수요’, 그리고 소비재, 자본재, 수출 상품 등으로 판매되는 ‘최종 수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합한 것을 총수요라 하고, 총수요에서

수입을 빼면 총산출이 된다. 따라서 총산출과 수입을 합하면 총공급이 된다.⁴⁰⁾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총공급(총산출액+수입액)} = \text{총수요(최종 수요+중간 수요)}$$

위 식에서 최종 수요는 민간 및 정부의 소비 지출을 의미하는 최종 소비(C), 민간 및 정부 고정 자본 형성과 재고 증가를 의미하는 투자(I), 그리고 수출(X)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rray}{c} \underline{Q_i + M_i} = \underline{C_i + I_i + X_i + D_i} \\ \text{(총공급)} \qquad \qquad \text{(총수요)} \end{array}$$

단, Q_i : i 산업의 국내총산출(부가가치생산+중간투입), M_i : i 산업의 수입,
 C_i : i 산업의 최종 소비, I_i : i 산업의 투자, X_i : i 산업의 수출, D_i : i 산업의 중간 수요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으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산업 생산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최종 소비(C_i)를 추정할 수 있다.

$$C_i = Q_i + (M_i - X_i) - I_i - D_i$$

위 식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최종 소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장 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보도 자료로 발표한 농민 시장 이용 비중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가정을 도입하였다.

40)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서울 : 한국은행, 1987), 18쪽.

첫째,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시장(농민 시장, 암시장 등을 모두 포함)을 통하여 농림어업 제품, 경공업 제품, 기타 서비스 등 세 가지만을 구입하고 소비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GDP 추정 결과』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 부문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광공업을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으로, 서비스 부문을 정부와 기타로 재분류하여 총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있다. 결국 첫번째 가정은 여덟 가지로 구분되는 북한의 산업 부문 중에서 세 가지 부문의 제품만을 농민 시장(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산업 부문, 즉 광업, 중화학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 서비스 등은 주민들이 소비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여타 산업 부문에서 생산된 제품도 시장을 통하여 일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 숫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농림어업 제품의 60%, 경공업 제품의 70%를 시장을 통하여 소비한다. 이는 주곡의 60%, 생활 필수품의 70%를 농민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통일부 보도 자료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주곡을 농림어업 제품으로, 생활 필수품을 경공업 제품으로 간주한 것이다.

셋째, 일반 주민은 북한 전체 주민의 85%만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농민 시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상류층과 현역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만이 농민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가정이다.⁴¹⁾

41) 북한에는 경제난 또는 식량난에 관계없이 전액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며, 북한의 현역 군인은 전체 인구의 4%를 상회하는 104

결국 시장 경제 부문의 추정은 먼저 위에서 제시한 식으로부터 최종 소비 규모를 추정하고 기본 가정을 이용하여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소비하는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농림어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렇게 추정된 농림어업 제품과 경공업 제품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 마진과 운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부문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1) 구체적인 추정 방법

(가)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의 시장 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산업 제품의 최종 소비 규모를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산업의 총산출액(Q), 순수입액(M-X), 투자액(I), 중간 수요액(D)을 추정해야 한다.

총산출액(Q)은 한국은행의 『1998년 북한 GDP 추정 결과』에서 발표된 부가 가치 생산액에 중간 투입액을 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북한의 각 산업별 총생산량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총생산량에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 가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북한의 부가 가치 생산액 이외에 중간 투입액 및 총산출액 추정치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총산출액을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는 농림어업 부문의 총산출액과 경공업 부문의 총산출액을 각각 47.8억 달러, 31.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2000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2000), 168~183쪽.

순수입액(M-X)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대북 반출입 및 수출입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단, 수출입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북한에 제공된 식량 원조를 감안해야 한다. 식량 원조는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수출입 통계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의 주민이 최종 소비하는 농림어업 제품 규모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KOTRA의 통계에는 북한이 해외로부터 유·무상으로 도입한 곡물의 총 규모만이 파악되고 있을 뿐 유상 도입분과 무상 원조분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1998년 중 총 곡물 도입량(103.6만 톤)을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가격을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수출입 통계에 포함시키고 수출입 통계에 포함된 곡물 도입 금액을 차감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추정된 농림어업 제품 순수입액은 7.2억 달러⁴²⁾ 경공업 제품의 순수입액은 1.1억 달러⁴³⁾이다.

한편,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에서의 투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시장을 통하여 소비하는 세 가지 부문이 대부분 소비재로서 투자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에서는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재고의 증가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산업에서의 투자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⁴⁾

42) 수입(백만 달러) : 861.6=수입(곡물 이외의 실물 제품 71.5+곡물 도입 770.2) + 반입(일차 산품 19.9)

수출(백만 달러) : 140.5=수출(산동물 61.0+식품 제품 57.7) + 반출(농업산물 11.4+수산물 10.4)

43) 수입(백만 달러) : 358.8=수입(조제 식료품 38.5+플라스틱 39.4+섬유 88.1+기타 153.5) + 반입(플라스틱, 고무, 가죽 4.7+섬유류 28.5+생활 용품 3.7+잡제품 2.4)

수출(백만 달러) : 249.5=수출(목제품 17.8+섬유제품 148.1+기타 40.8)+반출(섬유류 38.8+기타 4.0)

44) 한편 정부 소비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일반 주민을 전체 주민의 85%라고 전제한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정부 소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최종 소비 규모 추정 결과(단위 : 억 달러)

	총 산출액(Q)	순수입(M-X)	중간 수요(D)	최종 소비(Q+(M-X)-D)
농림어업 부문	47.8	7.2	18.8	36.2
경공업 부문	31.6	1.1	15.4	17.3

중간 수요액(D)은 각 산업의 총산출과 수입을 합한 총공급($Q_i + M_i$) 중에서 다른 산업 부문의 생산 활동에서 중간재로 사용된 부분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우 중간 수요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과 유사한 시기의 우리나라 중간 수요율⁴⁵⁾을 사용하여 북한의 중간 수요액을 추정하였다. 1998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NI는 573달러로 우리나라의 1975년도 1인당 GNP(594달러)와 비슷하므로 이 시기의 우리나라 중간 수요율(농림어업 부문 33.4%, 경공업 부문 43.7%)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북한의 중간 수요액은 농림어업 부문 18.8억 달러, 경

<표 4>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 시장 경제 규모 추정 결과(단위 : 억 달러)

	최종 소비 (A)	시장 이용 비중 (B)	일반 주민 비율 (C)	시장 경제 규모 (A×B×C)
농림어업 부문	36.2	60%	85%	18.5
경공업 부문	17.3	70%	85%	10.3

45) 중간 수요율은 총수요액(=총공급액, $Q_i + M_i$) 대비 중간 수요액(D)의 비율을 의미하며, 중간 수요액은 총공급액(=총수요액)에 중간 수요율을 곱한 금액임.

공업 부문 15.4억 달러이다.⁴⁶⁾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의 최종 소비 규모(C)는 농림어업 부문 36.2억 달러, 경공업 부문 17.3억 달러가 된다.

이렇게 추정된 북한의 최종 소비 규모에 기본 가정을 적용하면 북한의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의 시장 규모는 총 28.8억 달러(농림어업 부문 18.5억 달러, 경공업 부문 10.3억 달러)로 추정된다.

(나) 서비스 부문

북한에서도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기타 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음식 및 숙박, 수선을 비롯하여 금융 거래나 주택 임대 등의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타 서비스 부문의 규모 추정은 농림어업이나 경공업 부문의 시장 경제 규모 추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 결과』에 포함된 기타 서비스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통신업 및 주택 소유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일부 발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60~70%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 경제 규모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와 그 밖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숙박 등 일부 서비스만으로 제한하였다.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 총액은 시장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 마진 또는 화물 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시장 경제에 포함되는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 규모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 제품 규모에 상업 마진율과 화물 운임률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상업 마진

46) 농림어업(억 달러) : $18.8 = (\text{총산출액 } 47.8 + \text{수입 총액 } 8.6) \times \text{중간 수요율 } 33.4\%$
경공업(억 달러) : $15.4 = (\text{총산출액 } 31.6 + \text{수입 총액 } 3.6) \times \text{중간 수요율 } 43.7\%$

올과 화물 운임률은 중간 수요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975년의 상업 마진율과 화물 운임률(농림어업 부문 10.1%, 경공업 부문 18.3%)⁴⁷⁾을 사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농림어업 제품과 경공업 제품의 거래에 따른 도·소매 및 운수 서비스 규모는 각각 1.9억 달러가 되었다.⁴⁸⁾

한편, 시장을 통하여 소비되는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 규모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 추정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약 1.6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2) 추정 결과 종합

위에서 추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도 북한 명목 GNI(126억 달러)의 2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어업 부문이 18.5억 달러(1998년도 북한 명목 GNI의 14.7%), 경공업 부문이 10.3억 달러(1998년도 북한 명목 GNI의 8.2%), 서비스 부문이 5.4억 달러(1998년도 북한 명목 GNI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북한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 경제가 북한 경제 전체의 50%⁵⁰⁾ 정도라고 볼 경우 군수 경제를 제외하

47) 농림어업 부문은 상업 마진을 8.45%, 화물 운임률 1.65%이며, 경공업 부문은 상업 마진을 17.29%, 화물 운임률 0.98%이다.

48) 농림어업 부문(억 달러) : $1.9 = \text{시장 규모} \times \text{상업 마진} \text{ 및 } \text{화물 운임률}(10.1\%)$.
경공업 부문(억 달러) : $1.9 = \text{시장 규모} \times \text{상업 마진} \text{ 및 } \text{화물 운임률}(18.3\%)$.

49) 음식·숙박업 등의 수출입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1998년 북한에서 생산된 음식·숙박업 등의 총산출액은 2.9억 달러, 동 서비스 항목의 1975년 우리나라 중간 수요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중간 수요액은 약 0.2억 달러로 추정된다.

50) 일본의 다마키 모토이(玉城素)는 북한을 일반 경제, 군사 경제, 당 경제, 지하 경제의 4중 경제라고 정의하고, 군사 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의 5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예야 오사무, 김종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161~165쪽.

<표 5> 지출 측면에서의 시장 규모 추정 결과(단위: 억 달러)

	최종 소비	시장 이용 비중	일반 주민 비율	시장 경제 규모	GNI 대비 비중
농림어업	36.2	60%	85%	18.5	14.7%
경공업	17.3	70%	85%	10.3	8.2%
서비스	—	—	—	5.4	4.3%
음식·숙박 등	2.7	70%	85%	1.6	1.3%
상업 마진 등	—	—	—	3.8	3.0%
(농림어업)	—	—	—	(1.9)	(1.5%)
(경공업)	—	—	—	(1.9)	(1.5%)
합계	—	—	—	34.2	27.1%

나머지 일반 경제 활동에서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경제에서 시장 경제 부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위의 추정 결과에 대하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북한 명목 GNI의 27.1%)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가 34.2억 달러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달러로 표시된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가 다소 높게 추정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GDP가 북한의 생산량에 우리나라의 가격 체계를 적용하여 추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물가 수준에 익숙한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물가 수준을 감안한 북한 GDP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GDP 추정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시장 경제 부문의 물품 공급 출처별 규모 추정

위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은 1998년도 북한 명목 GNI(126억 달러)의 27.1%(34.2억 달러)를 차지하는데, 과연 북한이라는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 경제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장에서 이미 북한경제의 시장 경제 부문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주로 서술적인 분석에 치중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부문별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정의 수치적인 배경을 제시하였다.

시장 경제 부문에 공급되는 상품의 출처는 매우 다양하지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① 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 ② 중국 등과의 밀무역, ③ 가내 부업, ④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출처의 시장 공급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북한 농민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아울러 위에서 추정된 총 시장 경제 규모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1) 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

북한 주민들은 텃밭에서 곡물이나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길러서 일부는 자체 소비하고 나머지는 북한의 암시장에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상인 등을 통하여 중국 등지에서 보다 싼 곡물이나 생필품과 교환한다. 먼저 자체 소비되는 부분은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이라는 시장 경제 부문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시장 경제 규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되는 경우는 중국 등과의 밀무역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텃밭에서 생산된 물품이 밀무역 등을 통하지 않고 북한 시장에 직접 공급되어 일반 주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부분만을 추정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텃밭 경작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림어업 제품의 총액을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텃밭에서 생산한 물품 중에서 어느 정도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지는 더욱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의적으로 텃밭 경작 등을 통한 생산 총액의 30%만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였다.

텃밭 등에서 생산된 곡물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1997년 2월 3일의 보고서에는 북한이 총 202.2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고, 이 중에서 사적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44만 톤이라고 되어 있으며, 1998년 3월 2일의 보고서에는 총 214.8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적 생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68.4만 톤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 볼 때 텃밭 등에서 생산되는 북한 곡물의 규모는 총 곡물 생산량의 22.0~31.8%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표 6> 소련 농림의 사적 생산 규모(단위 : %)

연도	전체 소득 중 사적 텃밭 생산 비율	전체 산출물 중 사적 생산 비율(고기)	전체 산출물 중 사적 생산 비율(계란)
1960	45
1965	..	40	67
1970	35
1975	..	31	39
1980	28
1985	..	29	30
1985	26

* 출처 : 텃밭은 V. G Tremel(1987), 고기와 계란은 P. R. Gregory & R. C. Stuart(1986), Kornai, *The Socialist System*(1992), p. 81에서 재인용.

제출한 사적 생산의 규모는 국제 간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수치라고 보여진다. 즉, 소련 농업에 있어서 사적 생산은 1960년에 전체 수입의 45%, 1970년에 35%, 1980년에 28%, 1985년에 36%에 달한다. 북한 농업의 22~31.8%는 소련의 198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련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일면 사회주의 발전으로 개인 텃밭의 소득 기여 비율이 줄어갔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다시 사적 비중이 증가하였다.

한편, 북한이 FAO에 보고한 곡물 총생산량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이 추정한 곡물 총생산 추정량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북한이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하여 실제보다 적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1998년 곡물 생산량은 388.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 곡물 생산 대비 텃밭 생산비중을 22.0~31.8%라고 하면 1998년 중에 북한의 텃밭 등에서 생산된 곡물은 85.4~123.7만

<표 7> 북한의 식량 총생산 및 텃밭 생산 규모(단위 : 만 톤)

		1996년	1997년	1998년
북한자료 ¹⁾	총생산량	200.2	214.8	..
	농민 생산량	44.0	68.4	..
	농민 생산 비중	22.0%	31.8%	22.0~31.8%
추정	총생산량 ²⁾	369.0	348.9	388.6
	농민 생산량 ³⁾	81.2	111.0	85.4~123.7

* 주 1) 북한 농업위원회가 FAO에 제시한 양으로 정곡 기준.

2) 농업진흥청 추정 자료

3) 북한의 농민 생산 비중을 곡물 생산량 추정량에 적용하여 산출된 수치임.

* 출처 : 농촌진흥청,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1999), 남성욱,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1999)에서 재인용.

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하여 다소 과도하게 추정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월간조선자료』에 실린 “최근의 농민 시장에 관한 정책 동향과 경제이론연구”⁵¹⁾에서는 가구당 평균 텃밭 면적, 총 가구수, m²당 평균 생산량을 모두 곱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북한의 텃밭 생산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북한이 텃밭에서 옥수수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생산 가능 규모는 약 15만 톤(총 곡물 생산량의 약 3.9%)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가구당 평균 텃밭 면적이 농촌 가구는 95m², 도시 가구는 30m²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 농촌 가구수 및 도시 가구수를 감안하면 북한의 텃밭 규모는 총 2만 5,040ha, 즉 북한 총 경지 면적(1997년 기준 192만ha)의 1.3% 정도로 계산되며, ha당 생산 가능 규모를 옥수수의 경우 6톤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텃밭이 총 경작면적의 3%를 차지했던 구 소련의 경우⁵²⁾에 비추어 볼 때 총 경작면적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북한의 텃밭 규모를 과소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의 옥수수 최고 생산 규모가 1ha당 약 10~15톤이라고 증언한 리민복 씨(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의 주장 등을 볼 때 텃밭에서의 생산 가능 규모 역시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 소련의 경우 전체 경작 면적의 3%를 차지하는 텃밭에서 전체 농산물의 25% 이상을 생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서도 텃밭 등에서의 생산이 전체 곡물 생산의 22.0~31.8%를 차지한다는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텃밭 등에서의 곡물 생산 비중(22.0~31.8%)이 곡물 이외의 농림어업 생산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을 위한 농림어업 생산 규모는

51) 文浩一, “最近の農民市場に關する政策動向と經濟理論研究”, 朝鮮問題研究所編, 『月刊朝鮮資料』, 1999년 2月號.

52) 총 경작 면적의 3%를 차지하는 텃밭이 전체 농산물(금액 기준)의 25% 이상을 생산하였다.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분의 실태와 전망”(1998)에서 재인용.

10.5~15.2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며,⁵³⁾ 이 중에서 30% 정도가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공급되어 소비된다고 가정할 경우 텃밭 등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직접 공급되는 농림어업 제품 규모는 3.2~4.6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수입

통일부 보도 자료(1999년 1월)에 의하면 북한 농민 시장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농민 시장 가격도 중국의 시장 가격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탈북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최근 북한실상』(1999년 8월)에서는 장마당 상품의 절반이 중국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물품은 대부분 밀무역을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산이 아닌 경우에도 중국산으로 가장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곡물의 경우에는 국제 기구로부터 지원받은 곡물 중 일부가 유출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중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산 상품의 비중은 각종 증언에서 나타난 중국산 상품의 비중보다는 다소 작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의 비중을 농민 시장 유통 물품의 50% 정도라고 가정하였다. 결국 중국 등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어 북한 시장에 공급되는 규모는 농림어업 및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의 절반으로서 농림어업 부문은 9.3억 달러, 경공업부문은 5.2억 달러, 총 14.5억 달러가 된다.⁵⁴⁾

53) 농림 어업 총산출액(47.8억 달러)×텃밭 등에서의 생산 비중(22.0~31.8%)=10.5~15.2억 달러.

이러한 추정에도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중국 해관(세관) 통계를 인용, 발표한 북한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1997년에 5.3억 달러, 1998년에 3.6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밀무역이나 친인척 간의 증여 물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규모를 14.5억 달러라고 추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유입에 의한 시장 규모를 과대 추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관(세관) 통계는 중국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데 반하여 본 논문의 추정치는 우리나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농림어업 부문 9.3억 달러를 북한 GDP 추정에서 사용된 가격 체계를 이용하여 곡물량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 톤 정도가 되며 농림어업 생산에서 곡물 생산 비중이 약 60%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75만 톤의 곡물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약 75만 톤의 곡물을 비공식적으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오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텃밭 등에서 생산된 농림어업 제품 또는 계획 경제 부문으로부터 유출된 제품⁵⁴⁾ 등을 중간 상인 등을 통하여 중국에 판매하거나, 중국 상인에게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54) 농림어업 부문 시장 규모(18.5억 달러)×중국 상품 비중(50%)=9.3억 달러.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10.3억 달러)×중국 상품 비중(50%)=5.2억 달러.

55) 국가정보원의 『최근 북한실상』(1999년 9월)에서는 외화벌이나 밀수에 종사하는 장사꾼들이 중국에 넘겨 판매하는 제품으로 구리, 코발트, 니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거의 계획 경제 부문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어부들의 출어(出漁)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획량의 30% 정도를 취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경우(나진 지역에 근무 경험이 있는 귀순자의 증언,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1996)에서 재인용) 등 다양한 형태의 유출이 있다.

중국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있다.

중국산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로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국 조선족 상인에 의한 유입을 들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의주 주민의 경우 전 주민의 90% 이상이 장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내륙 지방 간의 거간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국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수집해서 중국에 넘겨주고 이를 식량으로 넘겨받아 북한 내 타지방 주민에게 비싸게 판매한다.⁵⁶⁾ 그 밖에 중국의 친인척이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북한 기업소 등에 의한 조직적인 밀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직접 중국으로부터 밀무역을 하는 경우 이외에 나진 시장 등에서 중국산 물품을 구입하여 내륙 지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1999년 3월 김정일이 “국가 기관·기업소 또는 개인들이 나진시에서 중국 상품을 대량으로 사서 평양시에 들여다 파는 것을 없애라”고 지시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⁵⁷⁾

(3) 가내 부업

북한 주민들은 가내 부업으로 농림어업 제품, 경공업 제품 등을 생산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어업 제품 생산은 텃밭 경작 등을 통한 생산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가내 부업을 통한 경공업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편,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의해 조직된 직장 내 부업반에서도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

56)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9년 9월.

57)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9년 8월.

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국가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해야 하며, 시장을 통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업반에서 생산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일종의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로 보고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먼저 시장 경제 부문의 서비스 제공은 모두가 가내 부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비스 부문의 시장 규모 5.4억 달러를 모두 가내 부업에 의한 서비스로 보았다. 물론 농민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일종의 계획 경제로부터의 노동력 유출이므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가내 부업보다는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이라고 분류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가내 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 생산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따른 부업반에서 생산된 경공업 제품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 생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내 부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하는 부분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내 부업으로 생산되는 경공업 제품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공업 제품 총액의 10% 이내 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가내 부업은 주로 주부들의 식료품 생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신의 기술로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농민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부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부업에 의한 생산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부

업 생산의 증대 속도가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 속도보다 늦어 시장의 부업 상품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가내 부업에 의한 경공업 제품 시장 공급 규모는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의 10%인 약 1억 달러가 된다.⁵⁸⁾ 결국 가내 부업에 의한 시장 공급 규모는 서비스 부문 5.4억 달러, 경공업 부문 1.0억 달러로 총 6.4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4) 기타

기타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은 앞에서 거론된 세 가지 공급 출처 즉, 텃밭 등에서의 생산, 중국으로부터의 비공식 수입, 가내 부업 등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8·3 인민 소비품 창조 운동에 따라 생산된 물품,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 상류층의 잉여분, 분조의 초과 생산물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 형태가 포함된다.

8·3 인민 소비품의 총유통액은 경제난이 악화되기 전인 1995년 북한 국영 상업망 유통액의 10% 수준⁵⁹⁾이었으나 1996년 이후 정부의 국영 상업망을 대신하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은 주로 공장, 기업소에서 권력 등을 이용하여 빼돌린 물품을 북한 농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은 대부분 중국과의 밀무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중국 등으로부터의 비공식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빼돌려진 물품 중에서 북한 시장에서 직접 판매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법적인 사취에는 기관, 기업소와 같은 조직의 사취와 개인의 사취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58) 경공업 부문 시장 규모(10.3억 달러)×가내 부업 비중(10%)=1.0억 달러.

59)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서울: 공보처, 1996), 101~102쪽.

기관, 기업소는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계획 달성을 위하여 일부 물품을 시장에 판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하고 무역 회사 등이 수입한 물품을 불법적으로 농민 시장에서 암거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적인 사취는 주로 직장에서 줌도둑질한 것을 말한다. 즉, 공장에서 자재를 훔쳐와 되팔거나 훔친 자재를 이용해 각자 집에서 재가공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자재를 되파는 경우가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에 해당된다. 상류층의 잉여분은 일부 상류 계층에게 주어지는 배급분 가운데 일부가 시장으로 유입되거나,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이용하여 외화 상점이나 국영 상점에서 싼 가격에 구입하여 농민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경우 등이다. 분조의 초과 생산분은 1996년부터 개선, 시행된 분조 관리제에 따라 국가 공출분을 초과하여 생산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권을 부여받은 곡물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 및 공장 간의 거래도 사적 거래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1961년 12월에 발표된 대안의 공급 체계는 공산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등을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들어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상급 기관 역시 원자재 공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소, 공장들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 계획의 틀을 벗어나 옷돈 또는 뇌물을 주거나 당사자간 친분을 이용하여 원자재를 확보하는 등 사적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타 방법에 의한 시장 공급 규모는 별도의 계산이 곤란하여 위에서 추정한 시장 경제 부문의 총 규모(농림 어업 18.5억 달러, 경공업 10.3억 달러, 서비스 5.4억 달러)에서 위의 세 가지 공급 출처에 물품 공급 규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기타 방법에 의한 농림어업 제품 공급 규모는 텃밭 등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된 농림어업 제품(3.2억~4.6억 달러)과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 규모(9.3억 달러)를 제외한 4.6

<표 8>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추정 결과(단위 : 억 달러)

	텃밭 경작 등	밀무역	가내 부업	기타	합계
농림어업	3.2~4.6 ¹⁾	9.3	—	4.6~6.0	18.5
경공업	—	5.2	1.0	4.1	10.3
서비스	—	—	5.4	—	5.4
합계	3.2~4.6	14.5 ²⁾	6.4	8.7~10.1	34.2
(비중 ³⁾)	(9.4~13.5%)	(42.4%)	(18.7%)	(25.4~29.5%)	(95.9~104.1%)

* 주 : 1) 텃밭 등에서 생산된 농림어업 제품 10.5~15.2억 달러 중 자체 소비되거나 중국 등지에서의 교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북한 시장에 그대로 공급된 부분임(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의 약 30%에 해당).

2) 중국 등과의 밀무역 대금은 텃밭 등에서 생산된 농림어업 제품과의 교환, 친인척 간의 증여, 음식·숙박 등의 서비스 제공, 기타 부문과의 교환 등에 의해 조달되는 것으로 추정됨.

3) 시장 경제 부문의 총 규모에 대한 각 공급 출처의 비중.

억~6.0억 달러가 되며, 기타 방법에 의한 경공업 제품 공급 규모는 개인 부업(1.0억 달러)과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5.2억 달러)을 제외한 4.1억 달러 내외가 된다.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의 규모(34.2억 달러)를 네 가지 공급 출처별로 추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위의 <표 8>과 같다.

4) 시장 경제 부문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

북한 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시장 경제 부문은 위의 추정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개인 부업 또는 장사의 경험이 있으며, 가게 수입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월급보다 가정 주부가 개인 장사를 통해 얻는 수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앙일보』가 1995년 1월 귀순자 35명의 장사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명(57%)이 직접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3명(9%)은 가족이 장사를 하였다고 대답한 반면, 본인도 가족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귀순자는 12명(3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여만철 씨 일가의 증언에 의하면, 세대주의 공식 월 임금이 북한 화폐 단위로 70원 정도였는데 가정 주부가 개인 장사를 통해 얻는 수입은 월 300~400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또 4급 기업소의 지배인 출신 귀순자에 의하면, 지배인의 한 달 월급이 170원 정도로 돼지고기 1kg을 사먹을까 말까 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 장사를 하면 4,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에서는 암시장이 생필품 획득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소련이나 동구권에서 암시장 및 지하 경제는 계획 경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생하였으나 배급 체계가 붕괴된 북한에서는 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장이 1일장으로 상설화되고, 거래 물품도 채소나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생필품에서 옷, 신발류 및 거래 금지 품목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위치가 좋은 곳은 어디나 거래 장소가 되고 있다. 암시장에서 구입하는 생필품은 공산품 70%, 주식인 옥수수가 60%일 정도로 암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시장의 가격은 보통 국정 가격의 10배에서 많게는 700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 과거 입쌀의 배급 가격이 1kg에 8전이었지만 현재 암시장에서는 90~100원, 옥수수는 1kg에 3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반 주민의 공식 월급이 한 달에 80원에서 120원임을 감안할 때 직장에서의 화폐 소득의 의미는 점점 감퇴하고, 대부분 암시장을 통해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⁰⁾ 결국 북한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가 자연스러운 경

60) 김경숙,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화 방안” 참조.

제 원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 이윤 동기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시장이 계획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보다 우선시되는 의식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5. 추정 결과의 함의와 파급 효과

1) 추정 결과의 함의

추정 결과 1998년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는 총 34.2억 달러로 1998년 북한 명목 GNI 126억 달러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국민 소득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이다. 이 정도의 비중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Kornai(1992)에 의하면 계획 경제에 의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베트남은 1987년에 71.4%, 유고슬라비아는 1987년에 86.5%, 폴란드는 1988년에 81.2%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장 경제 부문 27.1%를 제외한 북한의 72.9%는 1987년의 베트남 71.4%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적 부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비중은 1988년의 동독 88%, 1988년의 불가리아 95.9%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비교한 사회주의 국가의 수치가 사적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국제 간 비교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 경제의 비율이 예상외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계획 경제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순수 경제 및 당 경제

<표 9> 국제간 계획 경제 영역의 비교(단위 : %)

구분	계획 경제 부문의 비율 ¹⁾	계획 경제 이외 부문의 비율 ²⁾	연도
불가리아	95.9	4.1	1988
동독	96.4	3.6	1988
헝가리	92.9	7.11	1988
폴란드	81.2	18.8	1988
루마니아	95.5	4.5	1980
베트남	71.4	28.6	1987
유고	86.5	13.5	1987
프랑스	16.5(?)	83.5	1982

* 주 : 1) 자본주의 국가는 GDP 대비 비율, 사회주의 국가는 NI(국민 소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사회주의 국가의 수치는 국영 소유 기업 및 기관뿐만 아니라 협동 농장에서 생산한 비율을 포함한다.

2) 전체(100%)에서 계획 경제 부문의 비율을 차감한 수치이다.

* 출처 : Komai(1992),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 72.

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내각 중심의 일반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식량 생산 및 소비재 산업이 지나치게 부진하여 인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구책 확보 차원에서 계획 경제의 범주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더욱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경제의 이윤 추구 원리를 경험한 주민들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계획 경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 경제 규모 중에서 농림어업 부문은 가장 규모가 커 북한 경제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난이 심화되어 배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1998년 사이에 식량 부족에 의한 사망자 수가 200만~300만⁶⁾에 달한다는 관측이 있는데, 그나마 희생자가 정도에 그친 것은 시장 경제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식량 생산이 목표

에 미달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1년치 식량을 전부 배급해 주지 못하고 60%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나누어준다. 이 정도의 식량으로는 아무리 절약해도 5개월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⁶²⁾ 따라서 주민들은 장마당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공업 부문이 전체 경제 규모의 8.2%를 차지하는 것도 소비재 산업의 부진을 반영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선적으로 소비재 부문이 위축된다. 북한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을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시장 메커니즘을 황색 바람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배격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북한의 거의 모든 신문 논설과 방송에서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1999년 6월 1일자 『노동신문』과 『근로자』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는 제목의 공동논설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제국주의에 문을 열어주는 개혁·개방에 대하여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자본주의 사상 문화를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입장 이외에 과거와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 체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실린 리동구 박사의 “사회주의에서 농민시장가격의 올바른 조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농민 시장의 가격이 높게 형

6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305쪽; 좋은 벗들, 『사람답게 살고 싶소』(서울: 정토출판, 1999), 18쪽.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벤저민 길먼 의장은 1998년 8월에 일주일간의 북한 방문 결과 보고서에서 최근 3년 동안 2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2) 법륜, 『통일로 가는 길』(서울: 정토출판, 1999), 122~123쪽.

성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적 해결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³⁾ 이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 관련 잡지, 『김일성대학학보』, 『경제연구』 등에 소위 근대 경제학의 모델을 분석한 논문이 자주 게재되고 있다.⁶⁴⁾

시장 경제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제도적 조치에 있어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수용하려는 움직임과 계획 경제를 복구하고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려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 생산 분야의 분조 관리제의 개선이다. 기존의 분조 관리제를 개선하여 1996년부터 일정 생산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에게 처분권을 주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는 농업법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시장 경제 요소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부문은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로 이 지역에서의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에는 상품의 가격을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노동자의 월급을 인상(전 선봉군 종합 농장 기동예술 선전대원의 경우 60원에서 1,800원으로 약 30배 인상)하였으며, 식량 배급을 중단하는 대신 식량 판매제를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외화와 바꾼 돈’을 폐지하고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공정환율(1달러≒2.1원)을 시장 실세와 일치시키는 환율 현실화 조치를 단행하여 1달러당 200~220원의 환율을 적용하였다. 특히 자영업을 허용하고 국영 기업(협동 농장 포함)에

63) 농민 시장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의 농수산물 수매 가격의 정확한 설정, ②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의 활발한 운영, ③ 농민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 농장 직매 상업망의 적극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농민 시장의 가격(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독립 변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농민 시장 가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64) 예를 들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4년 2월호에는 근대 경제학에 자주 사용되는 코브-더글러스 생산 함수를 생산 성장의 요인 분석 모델 구성 방법으로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인 독립 재산제 실시를 장려하였다. 국경 무역을 위한 자유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 및 협동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대신에 오히려 계획 경제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이후 국가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경제난으로 이완되었던 그 동안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위축된 계획 경제 부문을 복구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년 4월 북한은 <인민 경제 계획법>을 제정하여 1946년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 발표 이후 지속되어 왔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내용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에 앞서 2월에는 김정일이 자유 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종사하던 공공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⁶⁵⁾하였다. 이는 최근 식량난이 완화되고 경제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경제적 요소의 수용 움직임과 계획 경제 체제의 재건 노력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둘째, 시장 경제 체제의 수용은 일시적 현상이며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경우 시장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셋째, 최근 북한의 변화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도다. 최근의 조치는 북한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고수하려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체제 유지에 원자탄보다 더 위

65) 2000년 2월, 김정일이 자유 시장 운영자들에게 시장 폐쇄와 원래 종사하던 공공 직장으로의 복귀를 명령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베이징발로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1999년 9월 1일.

험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시장 경제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정책 당국은 체제 유지를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개혁·개방은 결코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북한의 경제 관료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 극복과 체제 유지라는 정책 목표하에서 농민 시장의 확산이나 개혁·개방이 어느 정도의 체제 위협 요소가 되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와 남한측과 공동 건설을 추진중인 신의주 지역을 들 수 있다. 물론 나진·선봉의 계약 실적은 부진하다. 그래서 외자 도입이라는 당초 목표를 거두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북한 지도층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 착오는 향후 개방 정책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혁·개방에 대해 다소의 자신감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김정일 체제가 안정 궤도에 안착하였으며, 최악의 경제난과 배급 체계 와해 등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체제 위협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등에 근거한다.

한편, 북한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정상화되면서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 규모는 감소할 것이며, 경제가 회복되면서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유휴 인력이 줄어

들고 시장을 위한 생산 규모가 감소하여 결국 북한의 시장 경제 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2) 시장 경제 확산의 파급 효과

시장 경제 부문 확산의 파급 효과는 다방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은 계획 경제 부문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과제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휴 자원의 활용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시장 경제 부문은 계획 경제 부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유휴 인력 및 자재, 폐품 등을 활용하여 생활 필수품을 만들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30%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많은 인력이 유휴화되어 있다. 이러한 유휴 인력은 텃밭 경작이나 개인 부업을 통하여 농산물과 기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업 등에 종사하면서 각종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소비재 부족 문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부업이나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생활 필수품을 보충하고 있다. 셋째, 식량과 일상 소비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지방의 물품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 판매하는 보따리 장사꾼들에 의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은 먹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급 자족적 지역 자립 체제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부문을 통한 생산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경

66)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77~79쪽.

제 발전에 획기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텃밭의 경우 경작 가능한 토지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 부업 역시 생산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텃밭 생산이나 개인 부업의 경우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윤의 대부분이 소비에 사용되고 있다. 결국 농민 시장의 확대는 소비재 부족 문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물자 부족 문제 자체를 해소하기보다는 지역 간 물자 재분배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농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대부분이 계획 경제로부터의 유출에 의해 공급된 것이니 만큼 농민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정상적인 일상 소비재 생산 활동을 저해하며, 텃밭의 무리한 개간으로 인한 환경 파괴,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정부 관료들의 부정 부패 등 경제 외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 경제 부문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 의식을 변화시켰으며,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사적 자율화(privatization)'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 이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와 비교해 볼 때 그 방향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북한의 이러한 가치 의식의 변화가 체제 저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가치 의식 변화는 반체제적 저항 의식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물질적 실용주의에 더 가까우며, 북한 주민들은 시민 사회의 경험이 없어 아직 왕조 시대의 의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 시장 경제 부문 확산이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시장 경제 부문 확산은 남북 경제 통합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의 하나인 '경제적 과제의 조정기구(coordinating

mechanism)' 선택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경제적 과제 즉, 자원의 배분, 생산과 소비, 이익의 분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coordinating mechanism)가 무엇이나에 따라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로 구분하는데, 경제 통합 후에 남북이 어떤 경제 체제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 남북간의 경제적 이질감을 축소시켜 줄 것이다. 어떠한 조정 기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에 생소한 조정 기구 즉,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시장 경제 부문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시장 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북한의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개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남북 교류 협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 공동체 확립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 경제 요소를 수용하여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시장 경제로의 개혁이 체제 위협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 북한은 시장 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사실상 통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시장 경제에 대한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경제에 대한 실험이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는 경제 특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은 경제 특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진·선봉 지대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지역(신의주, 남포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보다 치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 지대는 남한 자본의 직접 진출을 배제하는 경제 정책을 취한 결과 남한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개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 특구 이외의 지역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확대하여 경제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축적된 자본이 빈약한 북한으로서는 개혁에 따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6. 맺음말

1998년 경제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계획 경제의 보호막에서 밀려났다. 그들은 부족한 물자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부업에 불과하였던 사적 생산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주민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사적인 생산에 주력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 경제 원리를 습득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 농민 시장(또는 장마당)과 암시장이라는 유·무형의 장소에서 사적인 상행위를 하면서 경제 문제의 자체적인 해결도 하고, 계획 경제의 부족한 점도 보충하였다. 현재 27.1%를 차지하는 시장 경제의 비중이 향후 증가할 것인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 개혁·개방이 되지 않는 한 비공식 부문으로서의 시장 경제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계획 경제의 규제를 거부하고 시장 경제 원리에 점점 더 의식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경제 부문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계획 경제 부문을 더욱 위축시켜 정치 체제의 변동으로 진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북한 경제의 27.1%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경제 비중은 북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시장 경제 부문

확산은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정부가 아닌 시장이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그들의 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공급자의 시장(Seller's Market)이 아니라 수요자(Buyer's Market)와 공급자가 병존하는 시장이다. 그들의 생존은 이제 시장에 달려있다. 이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를 습득시키고 정부가 없어도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사전 1』(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곽복선, “북한과의 중국 교역 통로-변경무역”, 『통일경제』, 11월호(1999).
- 고영환, 『평양 25시』(서울 : 고려원, 1992).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5년 11월, 1999년 9월.
-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주민이 증언한 북한 이야기”, www.nis.go.kr, (1999. 11).
- 『근로자』(1999. 6. 1).
- 김경일, “북한의 농장실태와 농민생활”, 『통일한국』, 8월호(1999).
- 김경숙,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의식화 방안”, 코리아스콥(www.koreascope.org), 1999.
-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 통일연구원, 1999).
- 김성철, “탈북자 대담 북한의 지방공업”, 『통일경제』, 3월호(1999).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1997).
-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경제논총』, 제6권 1호 (1997).
- 『김일성저작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2권 1호(1999).
- , “북한의 경제회복과 성장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연구과정 편, 『북한연구』, 제2호(1999).
- ,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방안』(서울: 농정연구포럼, 2000).
- 대산농촌문화재단 심포지엄 보고서, 『새천년을 향한 남·북한 농업협력』 (서울: 도서출판 백의, 1999).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각 연도판.
- 동용승, “암시장 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확산”, 『삼성경제』, 5월호 (1997).
- 『로동신문』(1999. 6. 1).
- 리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농민시장 가격의 올바른 조정”, 『김일성 종합대학학보』(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98).
- 文浩一, “最近の農民市場に關する政策動向と經濟理論研究”, 朝鮮問題研究所, 『月刊朝鮮資料』, 2月號(1999).
- 『민주조선』(1989. 5. 27).
- 법륜, 『통일로 가는 길』(서울: 정도출판, 1999).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 1995).
-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제5권(1996).
- 윤웅, 『북한의 지리여행』(서울: 문예산책, 1995).

- 이효근, “중국·북한 경제관계의 변화 전망과 대책”,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1999).
- 임강택,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통일경제』, 9월호(1999).
- 에야 오사무, 김종우 옮김,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서울: 청정원, 1999).
- 『연합뉴스』(2000. 3. 23).
- 연합통신, 『북한 50년』(서울: 연합통신사, 1995).
- 장원태, “날로 확산되는 북한의 지하경제”, 『LG 주간경제』, 1996. 10. 24.
- 전홍택,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의 실태와 전망”, 『북한경제논총』, 제4호(1998).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 “북한의 지하경제 확산과 지배구조 변화”, 『통일경제』, 2월호(2000).
- 좋은 벗들, 『사람답게 살고 싶소』(서울: 정토출판, 1999).
- 최동철, “탈북자 대담”, 『통일한국』, 4월호(1999).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통일·북한 핸드북』(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7).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체제론』(서울: 박영사, 1997).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서울: 한국은행, 1987).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 연도판.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 홍성국, 『북한의 상업·유통』(서울: 공보처, 1996).
- 통일부, 『2000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2000).
- 일본의 시사 주간지 『AERA』 2000年 3月 20日.

- allago, Bruno, *The Irregular Economy : The Underground Economy and the Black Labor Market*(Aldershot, England : Gower, 1990).
- Eberstadt, Nicolas,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 No. 2(1997).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DPRK" (1998. 11)
- Feige, Edgar L., *The Underground Economies*(Cambridge, U. 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Gabor, Istvan R., "The Second(Secondary) Economy : Earning Activity and Regrouping of Income Outside the Socially Organiz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ta Oeconomica*, Vol. 22, No. 3~4(1979).
- , "Second Economy and Socialism : The Hungarian Experience", in Feige, Edgar L.(ed.), *The Underground Economies* (Cambridge, U. 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Hirschman, Albert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System*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8).
- Karol, K. S., "Conversations in Russia", *New Statesman*, June(1971).
- Kapitany, Zsuzsa, Janos Kornai & Judit Szabo, "Reproduction of Shortage on the Hungarian Car Market", *Soviet Studies*, Vol. 36, No. 2 (1984).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Lee, Choon-Kun, "Outlook for North Korea in 1996 : Survival or Collapse", *East Asian Review*, Vol. 8, No. 1(1996).
- Sakai, Takashi,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 of North Korean

- Sakai, Takashi,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 of North Korean Ideology",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5 (1996).
- Snyder Scott, "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June(1998).
- Suh, Jin-Young, "North Korea's Political Crisis and Four Scenarios regarding the Process of Changes", *East Asian Review*, Vol. 9, No. 2(1997).

(Abstract)

Analysis of North Korea's Market Economy in 1988

Nam Sung Wook(Ehwa University, Economics)
Moon Sung Min(The Bank of Korea, Economics)

This paper focuses on North Korea's serious economic crisis in 1998. Compared to the whole economy of North Korea, we estimate that 27.1 percent of that portion is comprised of a market economy. The planned economy of North Korea did not work in the market, which shows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dependent o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n government's socialist economy, most of North Korea must provide their own foods and other supplies. Private productions, a miscellaneous economic factor of the past, have played a major role to solve the present economic difficulties. Most peoples have heavily depended on private productions for survival. In overcom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they have acquired the market economy principle of supply and demand. They have done private

business with the farmer's market and black market to solve personal economic problems and to substitute a socialist economic system with a market system. Whether the figure of 27.1 percent of the market economy increases or not, count on reform in North Korea. When reform does occur, the share of market economy will not increase.

During the difficult period, people have recognized that the market is more efficient to solve shortage problems. The market is not solely controlled by the seller's market of government ; it exists together with the buyers and sellers.

Key words : North Korea, Market Economy, Socialistic Economy, Economic Crisis.